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이지호 | 서강대학교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한정해서 정당이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이념적 위치와 유권자의 이념 정향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내용분석된 정당의 선거강령자료와 체계적으로 조사된 대중설문자료를 사용한다. 분석의 첫 번째 발견은 민주화 이후 정당이 진보-보수의 차원에서 서로를 주요하게 차별화해 왔다는 것이다. 정당은 이 차원에서 서로를 구별하면서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선택지로 되어 왔다. 두 번째로 진보-보수 척도에 따른 정당의 위치는 그들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의 이념 분포와 방향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논문은 한국의 정당과 유권자가 진보-보수의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세 번째 발견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은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보다 더 온건한데 반해,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이념성향은 그들의 정당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모습과 다른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국의 진보정당은 그들의 지지자들이 이념적으로 잘 적응되어 있지 못해 이념 선호를 주도하는 반면, 보수정당은 그들의 지지자들이 이념적으로 열정적이어서 그들의 입장에 순응하며 행동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논문은 한국에서 진보-보수 차원의 정치적 소통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추정한다.

I. 서론

정당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국회와 정부에 유권자 선호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가까운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투표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정당은 유권자에게 정책 약속을 제시하고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국회나 정부에 들어가 그들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리하여 정당의 정책적 위치와 유권자의 정향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늠하는 척도다.

한국의 경우 유권자가 이념이나 정책을 둘러싸고 정당과 소통하는가?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를 인식하고 투표하는가? 당장 최근의 선거만 보아도 정책 경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보면 주요 정당들은 BBK 등 네거티브 공세와 방어에 치중하면서 정책 대결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대선 후 4개월 만에 바로 실시된 2008년 총선 역시 정책공약에 대한 정당의 준비 부족에다가 계파 안배 및 당선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한 후보공천으로 쟁점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한다.

그러나 미디어에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이념이나 정책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 정당의 선거강령이나 방송연설, 후보자토론 등을 보면 정당 간 정책 차이가 매우 뚜렷해 보인다. 유권자 또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하는 응답자와 투표결정의 요인으로 정책과 정당을 지목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강원택 2008).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전망한다. 선거강령분석에 기초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축이 쇠퇴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북문제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차원에서 이념분화가 나타나다가 최근에는 점차 사회경제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지호 2008; 현재호 2008). 한편 유권자 수준에서 수행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이념성향이나 이슈평가가 지역주의와는 독립적으로 투표선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면서 반공주의

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이념투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강원택 2002; 이갑윤·이현우 2008).

이러한 정치 현실과 연구 성과를 배경으로 이 논문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정당이 정책적으로 표출하는 이념 위치와 유권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이념 정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최근 선거에서 한국의 정당들은 서로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가? 그러한 차이는 하나의 이념 공간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 정당 지지자 또한 이념 성향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하여 정당과 유권자는 하나의 공간에서 얼마나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유권자와 정당 중 어느 쪽이 이념적으로 더 분산되어 있는가? 어떤 정당이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더 유연하게 하는데 반해 어떤 정당이 더 극단적인가? 이런 문제에 답하면서 논문은 한국에서 정당과 유권자가 얼마나 이념적·정책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II. 방법론적 논의

정당의 이념 위치와 유권자 정향에 대한 연구는 정당이 유권자의 선호를 따른다는 다운스적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발전한다. 설문조사의 발달과 함께 분석은 주로 하나의 좌-우 이념 공간 위에 유권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위치와 유권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위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분석들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성향과 가까운 정당을 택한다는 다운스적 근접모델(proximity model)을 확인하거나(Hinich and Pollard 1981; Enelow and Hinich 1982), 정당과 거리가 멀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방향이 다른 가까운 정당보다 더 선호한다는 방향성 이론(directional theory)을 제시한다(Robinowitz and Macdonald 1989).

한국에서도 이념성향에 대한 설문조사의 발전과 함께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

위치에 대한 비교분석이 활발하게 수행된다. 선거후조사에 기초하는 이들 연구는 정당 지지자들이 스스로 설정한 이념성향과 그들이 판단한 후보자 및 정당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이념에 근접한 정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근접모형을 확인하거나(강원택 2002), 근접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념적 위치가 뚜렷한 후보를 선택한다는 방향이론의 우위를 강조한다(지병근 2006).

그러나 설문조사의 방법은 응답자의 인지가 실제 정당위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기술적 단점을 가진다(Budge and Farlie 1977). 즉, 정당위치의 측정을 유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응답자가 정당의 위치를 설정할 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호를 조금 달리 측정할 유권자의 선호와 비교하게 되는 동어반복의 문제를 안고 있다(Budge and Klingemann et al. 2001, 6, 75). 좌-우 혹은 진보-보수에 대한 판단 기준의 주관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찬반의 강도를 묻는 젠다(Janda, 1980)나 레이버와 헌트(Laver and Hunt 1992)의 방식이 도입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특정 정책의 찬반 척도 상에 위치설정은 정당이 실제로 많이 꺼리는 정책대조를 응답자에게 강요하게 되고 이로부터 도출하는 정당의 위치는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Budge 1999, 7-8).

설문조사방법과는 달리 강령분석방법은 정당이 실제 말한 것으로부터 정당의 위치를 도출한다.¹⁾ 강령분석에 의한 정당의 정책위치 측정은 정당이 매 정책마다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여러 정책을 놓고 강조를 달리함으로써 경쟁한다는 현저이론(saliency theory)에 기초한다(Robertson 1976; Budge and Farlie 1977). 강령분석방법이 가지는 장점은 설문조사가 가지는 이념위치설정에 대한 판단대상의 모호함과 판단기준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한다. 분석의 대상은 정당의 권위있는 회의체에서 나온 공식 문건이라는 점에서 분명하며, 판단의 기준은 구체적인 정책으로부터 나타나는 정책적 선호라는 점에서 명백

1) 선거강령에 기초한 정당경쟁의 공간분석은 '유럽정치협회(ECPR)' 산하 '강령연구그룹(MRG)'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체계화되고(Budge and Robertson et al. 1987), 오늘날 OECD 및 동유럽국가로 그 대상을 확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Budge and Klingemann et al. 2001; Klingemann and Volken et al. 2006).

하다.

정당 문헌에 기초한 공간분석이 발전하면서, 설문조사로부터 측정된 유권자의 이념정향을 강령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당의 위치와 비교하는 연구가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다(Klingemann 1995; Klingemann et al. 2006). 분석은 유럽 여러 국가에 걸쳐 비슷하게 존재하는 정당군(party families)과 그 지지자들의 이념 위치를 측정하면서, 정당의 이념적 배열이 유권자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어떤 정당군이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유연하게 하는지, 어떤 정당군이 특정 이념이나 정책에 더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시기별·지역별로 비교한다.

그러나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의 비교를 한국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 하나는 정당이 놓여지는 이념적 차원을 도출하는 문제이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위의 연구들은 국가별 분석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지배적인 차원—좌우 차원—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고안된 인덱스를 이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국가 내에 정당 간 비교이기 때문에 국가 특수적인 맥락이 고려된 차원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논문은 판별분석을 통해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제시한 선거강령으로부터 정당 간 경쟁의 지배적인 정책적 차원을 도출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국한되지만 1987년부터 지금까지의 대선과 총선에 나타난 중요 정당들의 강령분석을 필요로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당의 강령적 차이로부터 나오는 이념적 차원이 유권자가 스스로를 설정하는 이념 공간과 동질적인가 하는 것이다. 다운스(Downs 1957)가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적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그 이념적 연속선은 정당과 유권자가 함께 공유하는 정책쟁점—대개는 ‘시장자유 대 정부개입’—으로 구축된다. 그러나 정책 경쟁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면, 유권자가 위치하는 진보-보수의 이념공간은 정당이 위치하는 정책적 차원과 무관할지 모른다. 유권자 이념설정에서 정책적 기준이 작용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유권자 자신이 설정하는 이념위치가 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자 태도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봄으로써 유권자 이념 위치와 정당의 정책 위치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다. 자료에 의하면, 유권자의 진보-보수 인식과 정책 쟁점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²⁾ 유권자의 이념설정에는 이슈나 정책 이외에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태도(Levitin and Miller 1979) 혹은 당파적 요소(Inglehart and Klingemann 1972)가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 요소 또한 그들의 이념적 상징이나 이슈에 대한 입장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면서 작동하는 것을 고려하면(Conover and Feldman 1981), 유권자의 이념 정향에는 정당에서 나오는 정책과 이슈가 크게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부터 이 글은 정책선택호로부터 도출된 정당의 위치를 유권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이념 위치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

III. 주요 정당의 정책 강조

1. 기호화와 내용분석

이 절은 주요 정당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제시한 선거강령을 내용분석함으로써 정당 사이에 정책적 강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내용분석은 강령의 매 문장(sentences)을 기호화하고 각 정책범주의 언급 빈도를 전체 문장의 수로 백분율하여 정당의 정책강조의 차이를 양화하는 작업이다. 이 분석은 유럽정치학회의 ‘강령연구팀’에서 개발한 표준도식을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정당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슈는 빼거나 수정하고 새로운 이슈를 원 정책범주의 하위범주로 추가한다.³⁾

2) 2007년과 2008년 선거 후 국민의식조사자료에서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이슈평가는 $p(0.01)$ 의 수준에서 각각 0.29와 0.30의 상관성을 갖는다(한국리서치, “제17대 대통령선거 국민의식조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조사”).

3) 내용분석을 위한 코딩도식은 〈부록 1〉 참조.

〈표 1〉 정당의 정책 강조에 대한 시기별 비교

2002(대선)-2004(총선) N=8			2007(대선)-2008(총선) N=11		
정책범주	평균	표준편차	정책범주	평균	표준편차
복지 확대	7.86	2.37	복지 확대	12.14	5.17
민주주의	7.41	3.88	기술과 인프라	6.99	4.39
기술과 인프라	6.30	2.67	교육 확대	6.18	1.85
농업	6.27	1.06	경제적 유인	5.97	6.50
문화	6.07	2.28	환경보호	5.30	2.36
정치부패	5.55	2.90	시장규제	4.91	3.84
교육 확대	5.20	2.44	농업	4.19	2.28
시장규제	4.95	2.93	문화	3.83	2.38
환경보호	4.72	1.46	비특권 소수자	3.54	2.08
여성	4.68	3.32	여성	2.98	2.75

자료: 2002년-2008년 주요 정당의 선거강령 내용분석

먼저 2007-2008년 시기에 나타난 주요 정당의 정책 강조가 2002-2004년 시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 본다. 두 시기 모두에 공통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책범주를 제외하면, 〈표 1〉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시기에는 ‘민주주의’, ‘정치부패’ 라는 정치적 사안이 많이 강조된 반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경제적 유인’ 과 ‘소수자 보호’ 같은 경제와 사회정책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2-2004년 선거가 정치개혁, 병역비리,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었다면, 2007-2008년 선거는 사회·경제적 이슈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정책범주의 선호를 비교하며, ‘복지확대’ 는 양 시기 모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강조의 정도는 2007-2008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7.86에서 12.14). 그만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정보화·세계화시대에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인적 투자에 대한 정당의 강조는 ‘기술과 인프라’ 에 대한 높은 정책 선호로 나타난다.⁴⁾ 교육정책에 대한 강조가 더욱 늘어난 것 또한 정당이 민주화와 통일

같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경제적 유인’이 4번째로 강조되는 동시에 ‘시장규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규제완화와 세금감면과 같은 친기업 정책에 대해 기업규제와 소비자보호와 같은 서민정책의 대립을 암시한다. 나아가 ‘환경보호’와 ‘소수자 권리’에 대한 정책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저항’에서처럼 대중의 탈물질주의적 관심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당 간 정책 강조의 차이

〈표 2〉는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3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강조한 20대 정책범주를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당 간 정책 강조의 차이는 뚜렷하다. 공통으로 많이 강조되는 ‘복지확대’, ‘기술인프라’, ‘교육확대’ 정책을 도외시하면, 한나라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경제적 유인’과 ‘정부효율성’이다. 이외에도 ‘생산성과 성장’을 높게 선호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성장담론을 주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정당과는 달리 ‘교육 자율화’를 20대 범주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평준화정책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다른 두 정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20대 범주 안에서 ‘법과 질서’, ‘남북관계 부정’을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보수성을 유지한다.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복지정책을 가장 많이 강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술/인프라’와 ‘경제적 유인’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높게 선호하는 것은 중도주의적 정당으로서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인적 투자에 대한 강조이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4) 클링게만(Klingemann et al. 2006, 33)은 유럽 국가의 강령분석에서 최근 사회주의 정당의 ‘기술인프라’에 대한 강조는 New Labour 혹은 제3의 길에 영향받은 온건 집단의 비정치 이 슈임을 지적한다.

〈표 2〉 주요 3당의 정책 강조, 2007-2008

한나라당(n=2)		통합민주당(n=2)		민주노동당(n=2)	
정책범주	평균언급률	정책범주	평균언급률	정책범주	평균언급률
경제유인	16.52	복지 확대	13.37	복지 확대	16.37
복지 확대	13.93	기술과 인프라	9.47	시장규제	7.41
기술과 인프라	10.14	경제유인	6.26	친노동	7.32
교육 확대	7.02	비특권 소수자	6.18	여성	6.49
정부효율성	4.57	농업	5.33	농업	6.16
농업	4.51	문화	5.02	교육 확대	6.07
생산성과 성장	4.16	환경보호	4.67	민주주의	5.23
문화	4.09	시장규제	4.36	환경보호	3.84
환경보호	3.67	교육 확대	4.28	문화	3.78
시장규제	2.90	여성	4.26	비특권 소수자	3.65
경제목표	2.09	친노동	3.41	공공성강화	3.59
교육지출화	2.05	남북관계 긍정	3.26	남북관계 긍정	3.18
비특권 소수자	1.88	노인	3.14	사회정의	2.59
아동과 청소년	1.75	정치부패	2.37	자유와 인권	2.49
지방분권	1.56	민주주의	2.00	반군사	2.28
친군사	1.41	자유와 인권	1.77	공정과세	2.20
노인	1.28	정부효율성	1.69	노인	2.02
법과 질서	1.25	경제목표	1.65	아동과 청소년	1.91
친노동	1.13	친군사	1.61	평화	1.53
남북관계 부정	1.12	아동과 청소년	1.58	정치부패	1.34

한편, 통합민주당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조와 함께, 환경과 문화, 여성 등 사회적 이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한나라당과 대조적으로 통합민주당은 20대 범주 안에 ‘남북관계긍정’, ‘정치부패’,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기존의 정책 선호를 유지한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통합민주당과도 차별되는 정책 강조를 보여준다. ‘복지확대’에 대한 강조는 통합민주당과 비슷하나 ‘시장규제’와 ‘친노동’ 정책에 대한 높은 선호와 ‘공공성 강화’, ‘사회정의’, ‘공정과세’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민주노동당의 좌파적 성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표 3〉 정당 간 정책 강조의 차이(주요 신당)

자유선진당(n=2)		창조한국당(n=2)	
정책범주	평균언급률	정책범주	평균언급률
교육확대	7.66	기술과 인프라	11.96
지방분권	6.82	복지 확대	10.85
경제유인	6.64	환경보호	8.08
환경보호	6.36	교육확대	7.68
복지 확대	6.09	시장규제	7.62
남북관계 부정	5.16	정치부패	4.35
자유 기업	3.71	문화	3.88
국가유공자	3.50	자유와 인권	3.43
비특권 소수자	3.17	농업	3.07
정부효율성	3.14	정부효율성	3.07
친국제주의	3.07	민주주의	2.49
기술과 인프라	2.99	여성	2.48
노인	2.89	노인	2.46
미일특별관계	2.68	경제목표	2.38
경제목표	2.63	반성장경제	2.16
사회적 조화	2.53	비특권 소수자	1.97
자유와 인권	2.51	지방분권	1.90
정치부패	2.41	남북관계 긍정	1.82
군인과 공무원	2.14	친다문화주의	1.77
법과 질서	2.08	경제유인	1.73

민노당은 여성, 환경, 문화 및 소수자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두 정당과 달리 평화와 균축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탈물질주의적 이슈에도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민노당은 통합민주당과 같이 ‘남북관계 긍정’을 12번째로 높게 강조함으로써 반공·반북주의에 반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 좌파적 성향을 유지한다.

〈표 3〉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정책 차이를 보여준다. 다른 정당에 비해 자유선진당의 정책 강조는 분산되어 있다. ‘교육’이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창조한국당의 언급률보다 낮다. 다른 정당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지방분

권'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는 지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정당의 정책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경제 유인', '자유기업', '정부효율성'과 같은 정책을 높게 선호하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별히 '대북관계 부정', '사회조화', '법과 질서'에 대한 높은 강조는 자유선진당의 반공주의와 보수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기술/인프라'를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중심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던 그들 정당의 핵심 정책방향을 반영한다. 또한 창조한국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정치부패'를 많이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에 호응한다. 복지확대와 시장규제를 높이 선호하는 면에서 좌파적 성향을 볼 수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반성장경제', '소수자 보호', '친다문화주의'를 선호함으로써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이슈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창조한국당은 통합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신중도주의적 입장에 서면서도 통합민주당보다 분명한 이념적 태도를 보여준다.

IV. 정당의 위치 측정

1. 코딩의 수정과 판별분석

민주화 이후 정당 간 경쟁의 주요 차원을 얻기 위해서 논문은 판별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총선과 대선에 나타난 총 12개 주요정당의 43개 선거강령이 분석된다.⁵⁾ 그리고 판별분석을 위해 앞장에서 사용한 코딩도식은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정당을 잘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

5) 주요 정당은 사르토리의 기준(Sartori 1976, 121-5)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전국 선거에서 5%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다(Budge and Robertson et al. 1987, 31).

로 재조직된다. 원 정책범주들은 더 포괄적인 범주 안으로 융합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영역을 뛰어넘어 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총 23개의 수정된 정책 범주가 판별분석에 투입된다.⁶⁾

분석에 포함된 12개의 정당은 이념적 고려에 따라 4개의 정당군(party family)—보수당계, 중도보수당계, 중도진보당계, 진보당계—로 분류한다.⁷⁾ 판별분석은 정책 선호의 차이로부터 정당을 가장 잘 분류하는 함수를 도출하고, 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당을 판별할 수 있는 정책 범주를 알려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당 경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한국적 진보-보수 인덱스를 개발한다.

정당을 4개 집단으로 분류함에 따라 판별분석의 결과는 3개의 함수를 도출한다. <표 4>는 판별함수들과 정책범주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시한다. [함수 1]은 명백하게 한국적 맥락이 담긴 ‘진보-보수’의 개념을 표출하고 있다. 양의 방향에서 ‘민족평화’, ‘조정경제’, ‘자주외교’, ‘복지국가’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고, 음의 방향에서 ‘시장경제’, ‘대북안보’와 ‘정부효율성’이 중요하게 적재된다. ‘시장경제’, ‘정부효율성’에 대해 ‘조정경제’, ‘복지국가’의 정책범주가 강조되는 것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좌파적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하여 ‘민족평화’와 ‘자주외교’와 같은 진보적 외교정책이 군사력 강화와 대북협력 부정,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포괄하는 ‘대북안보’의 범주와 대립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념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함수 2]는 ‘경제인프라’, ‘농업경제’에 대해 ‘정치안정’, ‘권위와 질서’, ‘민족주의’ 등과 같은 보수적 사상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정이나 통합 보다는 경제적 성장 및 발전 위주의 사고를 표출한다. [함수 3]에서는 ‘지방분권’, ‘자유인권’, ‘민주주의’, ‘국제협력’ 등이 ‘비경제집단’, ‘환경과 문화’ 그리고 ‘교육개선’과 같은 민생정책에 대립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일상적 삶의 문제에 대해 민주화와 인권과 같은 정치적 이슈의 중요성을 표출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6) 수정된 정책범주는 <부록 2>를 참조.

7) 정당군의 분류는 <부록 3>을 참조.

(표 4) 정책범주와 한국 정당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판별함수 사이의 상관관계

	함수 1	함수 2	함수 3
	진보 대 보수	성장주의 대 보수주의	사회문제 대 민주화
시장경제	-.254	.017	-.150
민족평화	.202	.182	.004
조정경제	.200	.022	.029
자주외교	.199	-.098	.056
복지국가	.178	.021	-.018
대북안보	-.163	-.104	.087
정부행정 효율성	-.119	.074	.038
정치부패	.072	-.067	.043
비특권소수자	.049	-.045	.012
정치안정	-.180	-.431	.249
경제인프라	-.184	.307	-.096
전통와 질서	-.184	-.216	-.029
민족주의	-.118	-.188	.032
농업경제	-.029	.142	-.040
지방분권	-.105	-.111	.189
국제협력	-.031	.006	.186
자유인권	.056	.000	.165
비경제집단	.006	-.023	-.163
민주주의	.142	-.131	.158
경제목표(고용)	-.056	.064	.095
환경문화	.034	.041	-.082
교육확대	.016	-.059	-.077
Canonical Correlation	.965	.861	.845
% of Cases Correctly Classified	71.8	15.1	13.1

주: 1) 칸 안의 수는 판별 변수와 표준화된 판별함수 사이의 집단 내 상관계수

2) **굵은 숫자**는 함수별로 중요한 정책범주

자료: 1987년부터 2008년까지 대선과 총선에서 제출된 주요정당의 선거강령

2. 진보-보수 인덱스 만들기

관별분석을 시도한 것은 정당 간 경쟁에 놓여진 가장 지배적인 정책적 차원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한국 현실을 반영하는 이념 차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함수 1]이 상관계수 71.8%의 확률로 정당을 관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차원에서 중요하게 연관되는 정책범주를 중심으로 적재되는 부호에 따라 진보-보수의 범주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이 주요하게 놓여지는 진보-보수의 인덱스는 <표 5>와 같다.

각각 7개의 보수와 진보의 정책범주가 설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당이 하나의 선거강령에서 보수 정책을 강조한 비율에서 진보 정책을 강조한 비율을 뺀으로써 진보-보수의 위치를 도출한다. 한 정당이 모든 문장을 보수의 정책으로 일관했다면 그 점수는 100이 될 것이고 그 반대는 -100이 되기 때문에 정당은 201점 척도에 놓여지게 된다.

<표 5> 진보-보수 인덱스

보수		진보
대북안보	-	민족평화
국가주의		자주의교
정부효율성		민주주의
정치안정		정치부패
시장경제		조정경제
생산성과 성장*		복지국가
전통과 질서		비특권소수자

* 관별분석에서 ‘경제인프라’가 [함수 1]에 음의 방향으로 크게 적재되어 보수정책으로 분류되지만, ‘경제인프라’의 원범주 중 ‘기술인프라’를 제외하고 ‘생산성과 성장’만을 보수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술인프라’가 이론적으로 특별히 보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인프라’는 오히려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를 강조하는 중도좌파정당에 의해서 많이 강조된다(주4 참조).

V. 정당의 위치와 이동

〈표 6〉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진보-보수 위치를 보여준다. 두 선거를 위한 정당의 평균 위치를 보면, 민주노동당이 가장 왼쪽(2.17)에 존재하고, 중간 지점(5)에서 약간 왼쪽에 통합민주당(3.76)과 창조한국당(3.64)이 위치하며, 약간 오른쪽으로 한나라당(5.50)과 그 옆으로 자유선진당(5.79)이 나타난다. 정책공약으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정당 배열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이념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시대 변화를 강조하고 이에 따른 진보적 중도이념을 선명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통합민주당보다 조금 왼쪽으로 놓일 것으로 기대될 수 있지만, 그 거리는 매우 가깝다. 자유선진당 또한 정통보수를 자처하면서 반공·반복적 태도와 법과 질서의 강조가 한나라당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지만, 한나라당과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는 것 외에 이념적 차이는 크지 않다.

〈표 6〉 정당별 선거강령의 진보-보수 위치, 2007-2008

정당	평균	대선	총선	이동
민주노동당	2.17	2.77	1.56	-1.21
창조한국당	3.64	3.76	3.52	-0.24
통합민주당	3.76	4.17	3.35	-0.82
한나라당	5.50	5.17	5.83	0.66
자유선진당	5.79	5.71	5.86	0.15
전체	4.17	4.32	4.02	-0.30
범위	3.62	2.94	4.30	1.36

주: 1) 숫자는 강령분석을 통해 도출된 201점 이념척도(-100에서 100까지) 상의 점수를 유권자 이념위치와 비교하기 위해 11점 척도로 환산한 것

2)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더 진보적이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보수적임을 의미

자료: 각 정당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당시 선거공약 내용분석

〈표 6〉은 정당의 위치뿐만 아니라 대선과 총선 사이의 위치 이동을 관찰한다. 비교에서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양 선거 사이에 같은 중도진보정당으로 보이는 창조한국당과 통합민주당 사이의 자리 바뀜 외에 주요 정당의 이념적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의 이념적 위치가 적어도 최근 두 선거 사이에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정당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좌경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보수정당들보다 진보정당들이 중간지점에서 훨씬 더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 위치는 다음 장의 유권자 정향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2008년 총선에서의 정당 간 이념적 분화 현상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통합민주당은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념 거리는 2.94에서 4.30으로 벌어졌다. 이는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 비판을 강하게 하고, 분열된 민주노동당이 기존 지지층 확보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선거 수준에 따른 환경의 차이로 보면, 다당구도의 경향이 강하고 투표율이 낮은 총선에서 정당들의 고정층 확보를 위한 립서비스가 이념적 분산을 가져온다고 설명할 수 있다.

VI. 유권자의 위치와 이동

진보-보수의 차원은 복잡한 정치세계에서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알게 하는 정치적 거리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복잡성을 줄이는 수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소통의 기호로 역할한다(Klingemann 1995, 191). 정책 위치의 상세함과 차별화는 ‘진보’ 혹은 ‘보수’에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그리하여 정치적 정향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유권자의 마음에서 일반화될 수 있다.

〈표 7〉은 정당의 지지자가 스스로 판단한 이념 위치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표 7〉 정당 지지자가 스스로 설정한 이념 위치, 2007-2008

	평균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이동
민주노동당(n=28/40)	4.32	4.50(2,56)	4.13(2,46)	-0.47
창조한국당(n=78/43)	4.50	4.51(1,63)	4.49(2,16)	-0.02
통합민주당(n=154/100)	4.60	4.63(1,86)	4.56(2,42)	-0.07
한나라당(n=628/209)	6.13	5.62(2,23)	6.63(2,12)	1.01
자유선진당(n=112/32)	6.34	5.71(2,23)	6.97(2,50)	1.26
전체	5.19	5	5.36	0.36
범위	2.02	1.21	2.48	1.27

주: 1) n의 앞의 수는 대선자료의 사례 수, 뒤의 수는 총선자료의 사례 수

2) 숫자는 진보-보수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에서의 점수

3) 괄호 안의 수는 표준편차

4) 평균은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층의 이슈평가를 평균한 것

자료: 한국리서치, “제17대 대통령선거 국민의식조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조사”

모습은 명백하다. 가장 왼쪽에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이 위치하고 가장 오른쪽에는 자유선진당의 지지층이 놓여진다. 이러한 배열은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하고, 앞에서 본 정당의 이념 순서와도 같다. 이웃하는 정당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큰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1.53이고, 나머지 이웃 정당 간 거리는 0.2 안팎으로 가깝다. 다른 말로 하면 정당 지지층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정당과는 달리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보다 이념적으로 더 강경하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 범위는 중간지점(5)으로부터 0.68인데 비해 우파정당 지지자들은 1.34로 벌어져 있다. 이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진보적 유권자들에 비해 이념적으로 더 열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그들의 정당보다 이념적으로 훨씬 온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집단 수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이거나 민노당 지지자들이 일시적으로 우경화된 결과로 보인다.⁸⁾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정당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대선과 총선 사이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지지층의 배열이 민주노동당에

서 자유선진당 순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이념 위치도 양대 선거 사이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진보 정당의 지지층과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 이념적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범위 1.21에서 2.48). 이로부터 우리는 두 선거 사이에 정당의 이념적 분산을 유권자의 이념적 분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총선에서 투표참여자는 정당 충성도가 강한 이념적 고정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정당은 그들의 의견을 고려해 자신을 설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평균(5.19)은 정당의 이념평균(4.17)과는 달리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히 진보 정당들의 좌경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선거의 연이은 실패가 진보 정당들이 일반국민의 이념적 우경화에 부응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VII. 정당과 유권자의 위치 비교

〈그림 1〉은 〈표 6〉에서 나타난 정당의 평균이념위치와 〈표 7〉에서 보이는 정당 지지자의 평균이념위치를 시각적으로 비교한다.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선(진보-보수 스펙트럼)의 위쪽에 정당의 이념 위치를, 아래쪽에는 정당 지지자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두 가지 주요한 인상이 이 분포로부터 즉각적으로 떠오른다.

첫째는, 정당과 지지자들의 이념적 배열이 서로 같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이념적 방향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정당과 그 지지자가 다른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 특별히 가깝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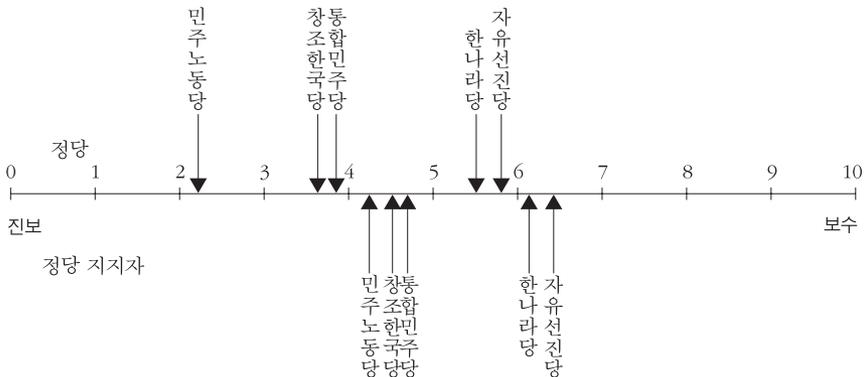
8)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이념위치는 2002년 2.93, 2004년 2.98로 나타남(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 2002년, 2004년 선거 후 국민조사자료).

라도 정당과 지지자가 방향성에서 서로의 위치를 인지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한국의 정당과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보정당들은 그들의 지지자들보다 이념적으로 강경한데 반해 보수정당은 지지자들의 이념성향보다 온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유럽 정당과 유권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교해 보면 이 발견은 몇 가지를 시사한다. 서유럽에서 좌익 정당들은 조직적인 연계기관을 가지면서 지지자들의 이념적 열정을 대체로 따르는 반면, 우익 정당들은 지지자와의 신뢰할 만한 연계기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념적 순수성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해 쉽게 중간 유권자 위치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Klingemann 1995, 198). 그러나 한국에서 보수블록은 서구와 비슷하고 진보블록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진보정당이 이념적으로 극단적인데 반해 그 지지자들은 온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이 현상이 지지층의 일시적인 우경화의 결과라면, 이는 방향성 이론(directional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Robinowitz and Macdonald 1989; 지병근 2006 참조). 즉, 진보정당의 지지층은 자신의 위치를 일시적으로 우경화하더라도 자신의 현 위치와 가까운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오래 적응되어 온 이념적 방향에 있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향적인 양상이라

〈그림 1〉 정당과 정당지지자의 이념평균위치



면, 선호형성모델(preference-shaping model)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Dunleavy 1991 참조). 즉, 한국에서는 진보적 유권자들은 이념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진보정당이 지지층의 이념적 선호를 형성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계급균열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은 보수층보다 이념에 적응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하여 정당이 이들을 이념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념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보수층 유권자들은 근접모형(proximity model)의 가정처럼 자신의 입장에 가까운 정당을 선택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선호순응모델(preference-accommodating model)의 가정처럼 지지층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중간 유권자의 위치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VIII. 결론

이 논문의 처음에 두 가지 연결된 부정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유권자와 정당은 이념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거의 소통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하여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분석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자료에 의해서 위의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정당별로 시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내용분석된 정당의 선거강령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선거를 위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대중 설문조사이다. 이들 자료는 표준화된 진보-보수 척도에 따라 정당의 위치와 유권자의 정향을 비교하는 재료를 제공한다.

정당과 관련된 중요한 첫 발견은 주요 이슈가 차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정당이 공통의 차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시기에 진보-보수 차원은 정책경쟁에서 중심적이며 이슈의 내용으로 정당을 구분하게 한다(표 4). 최근 선거를 보면 정당은 제일 왼쪽에 민주노동당부터 제일 오른쪽에 자유선진당까

지 일반의 기대처럼 배열된다(〈표 6〉). 개별 선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정당의 위치는 방향성에 있어 안정적이다. 이는 한국의 정당이 의미있는 선택을 유권자에게 제시해 온 것을 의미한다.

진보-보수 척도에 따른 주요 정당의 위치는 그들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의 이념 분포와 방향성에서 완전히 일치한다(〈표 7〉, 〈그림 1〉). 정당은 그들 사이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관계를 가지는 것 같다. 이는 진보-보수 차이가 선택의 기초로서 정치 담론과 정치 소통에서 정당과 정책 선호를 배열하는 주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좌-우 이념차원이 더 이상 서유럽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한국의 정당도 이제 진보-보수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특징적인 발견은, 정당 지지층의 이념분포가 정당보다 대체로 넓게 퍼져 있는 유럽 국가와 달리, 정당 지지층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정당의 분포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그림 1〉).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이 그들의 정당보다 이념적으로 더 온건하게 나타나며, 보수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정당보다 더 강경하게 보이는 이 현상은 진보-보수 차원의 정치적 소통이 한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진보정당 지지자들이—이념적 방향성에서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념적으로 적응되어 있지 못해 그들의 정당이 오히려 지지자를 향해 이념적 선호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계급균열의 발달을 경험하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통해 이념적으로 결집한 한국의 보수층은 이념적 열정을 보이면서 그들의 지지 정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이 글은 보수정권의 정책수행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진보층이 사회적 처지를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한국 사회에 좌-우의 이념 정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본다.

〈부록 1〉 정책영역별 정책범주

외교관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경제	삶의질	사회적 짜임	사회그룹
특별관계 +/- => 남북관계 +/-	자유와 인권	지방분권 +/-	자유기업	환경보호	국가적 삶 +/- => 국가유공자	노동 +/-
탈식민주의 제외	민주주의	정부효율성	경제적 유인	문화	전통적 도덕 +/-	농민 +/-
군사 +/-	헌정주의 +/-	정치부패	시장규제	사회정의 => 공정과세	법과 질서	중산층 => 공무원
평화	=> 대통령제+ => 내각제+	정치권위	경제계획	복지 +/-	사회적 조화	비특권소수자 => 해의동포
국제주의 + => 미일관계+			조합주의	교육+	문화적 다원주의 +/-	비경제 그룹 => 여성, 노인, 아동
국제주의 - => 자주의교+			보호주의 +/-	교육- => 자율화		
EC +/- => 아시아 연대+			경제목표			

주 1) +/-의 표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를 의미하는 대립적 성격의 이슈를 의미.

2) =>: MRG의 원코드에 대한 대체.

3) -: 하위범주

4) (:): 의미 부가

5)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의미부가 포함해서 대체범주와 하위범주

6) 이 외에 경제영역에 포함된 범주는 케인즈경영, 생산성(성장·개발), 기술/인프라, 조정 경제, 국유화(**공공성장화**), 경제적 정통성, 반성장경제

〈부록 2〉 수정된 코딩범주

영역	수정된 코딩범주	기존의 코딩범주
외교영역	민족평화	대북관계긍정, 평화, 군사부정
	대북안보	대북관계부정, 군사긍정, 미일특별관계
	국가주의	국가적 삶 긍정, 국가유공자, 사회조화
	국제협력	국제주의, 아시아연대, 국가적 삶 부정
	자주의교	자주의교
정치영역	자유인권	자유인권
	민주주의	민주주의

영역	수정된 코딩범주	기존의 코딩범주
정치영역	지방화	지방화
	정부안정	정치권위, 헌정주의, 내각제, 공무원
	정부효율성	정부효율성
	정치부패	정치부패
경제영역	시장경제	자유기업, 경제적 유인, 자유무역, 경제적 정통성
	조정경제	시장규제, 경제계획, 조합주의, 보호주의, 케인즈경제, 통제경제, 공공성강화
	경제인프라	생산성과 성장, 기술과 인프라
	농업경제	농민과 농업
	경제목표	경제목표
사회영역	전통과 질서	전통가치공정, 법과 질서, 다문화주의 부정
	복지사회	사회정의, 공정과세, 복지확대, 노동공정
	교육확대	교육확대
	교육자율화	교육자율화
	환경문화	환경, 반성장경제, 문화
	비특권소수자	비특권소수자(장애인, 이민자 등), 다문화주의 긍정
	비경제집단	여성, 노인, 아동

〈부록 3〉 정당군의 분류

정당군	가치 및 이념	포함되는 정당
보수정당군	강한 반공·반북이념, 전통적 가치와 법·질서, 시장경제와 작은정부 지향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중도보수정당군	반공주의와 발전주의 유지,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통일국민당
중도진보정당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정분배, 평화통일 강조, IMF 이후 '제3의 길' 노선 지향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진보정당군	80-90년대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에 뿌리, 사회주의, 좌파 민족주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자료〉

- 대통합민주신당. 2007. 『가족이 행복한 나라—대통합민주신당 정책공약집』.
- 통합민주당. 2008.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http://www.manifesto.or.kr>(검색일: 2009.1.14).
- 민주노동당.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 _____.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http://www.kdlp.org/2007_vote/book.pdf(검색일: 2008.12.19).
- _____. 2008. “서민도 좀 먹고 삽시다—제18대 총선공약.” <http://www.manifesto.or.kr>(검색일: 1.14).
- 새천년민주당.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 자유선진당. 2007.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국민과의 약속1.” http://www.leehc.org/policy/disk.php?mode=view&code=h2b_disk&ui...(검색일: 2008.12.19).
- _____.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http://www.manifesto.or.kr>(검색일: 2009.1.14).
- 조선일보사. 1992. 『第14代 國會議員選舉 資料集』. 朝鮮日報 編輯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政黨의 選舉公約』.
- _____. 1998. 『97政堂의 活動概況 및 會計報告』.
- 진보신당. 2008. “진보신당 18대 총선 정책공약.” <http://www.manifesto.or.kr>(검색일: 1.14).
- 창조한국당. 2007. “사람중심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문국현의 100대 약속.” http://www.ckp.kr/Board/View.asp?it_BoardSeq=4&it_Seq=3108(검색일: 2008.12.19).
- _____. 2008. 「사람중심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제18대 총선 공약집」. http://www.ckp.kr/Board/View.asp?it_BoardSeq=4&it_Seq=124429(검색일: 2009.1.14).
- 한국정책학회. 1992. 『14대 대통령 선거—정당의 정책설명 자료집』. 서울: 극동문화사.
- _____.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정견·정책 자료집』. 서울: 한국정책학회.
- _____.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 http://www.kaps.or.kr/src/main/etc.php?type=2004election_view2(검색일: 2008.12.22).
- 한나라당.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 _____. 2007. 『일류국가·희망공동체·대한민국』. 서울: 북마크.
- _____. 2008. 2008년 “한나라 비전과 실천.” <http://www.hannara.or.kr>(검색일: 2009.1.14).

[참고문헌]

- 강원택. 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형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2』. 서울: 푸른길.
- _____. 200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16대 총선-지역 균열과 이념 균열의 증첩?” 『한국의 선거 4』.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_____.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2008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http://www.kpsa.or.kr/AsaBoard/asaboard_show.php?bn=publication04&fmlid=123&pkid=125&startTextId=30&buffer=151&thisPage=2&jk=1&mode=search&srchValue=&searchTemp=&term=\(검색일: 1월 5일\)](http://www.kpsa.or.kr/AsaBoard/asaboard_show.php?bn=publication04&fmlid=123&pkid=125&startTextId=30&buffer=151&thisPage=2&jk=1&mode=search&srchValue=&searchTemp=&term=(검색일: 1월 5일)).
- 이갑윤 ·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37-166.
- 이정복. 1992. “한국의 투표형태: 제14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제3호, 113-32.
- 이지호. 2008.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4호, 95-126.
- 현재호. 2008.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4호, 213-242.
- Budge, Ian. 1999. *Expert Judgements of Party Policy Positions: Uses and limitations in Political Research*. Colchester: Department of Government, University of Essex.
- Budge, Ian, and David Farlie. 1977. *Voting and Party Competition: A Theoretical Critique and Synthesis applied to Surveys from Ten Democracies*. London and New York: Wiley.
- Budge, Ian, David Robertson, and Derek Hearl, eds. 1987. *Ideology, Strategy and Party Change: Spatial Analyses of Post-War Election Programmes in 19 Democra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dge, Ian, and Hans-Dieter Klingemann et al. 2001. *Mapping Policy Preferences: Estimates for Parties, Elections and Governments, 1945-199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Dunleavy, Patrick. 1991.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Economic Explanations in Political Science*.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2. "Ideology, Issues and Spatial Theory of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3: 493-501.
- Hinich, Melvin J., and Walker Pollard. 1981. "A New Approach to the Spatial Theory of Electoral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2: 323-41.
- Jhee, Byobng-Kuen. 2006. "Ideology and Voter Choice in Korea: An Empirical Test of the Viability of Three Ideological Voting Model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0, No. 4: 61-81.
- Klingemann, Hans-Dieter. 1995. "Party Positions and Voter Orientations." In Hans-Dieter Klingemann and Dieter Fuchs, eds. *Citizens and th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lingemann, Hans-Dieter, Andrea Volkens, Judith L. Bara, Ian Budge, and Michael D. McDonald. 2006. *Mapping Policy Preferences 2: Estimates for Parties, Elections and Governments, Eastern Europe, European Union, and OECD 1990-20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ver, Michael, and W. Ben Hunt. 1992. *Policy and Party Competi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 Levitin, Teresa, and Warren Miller. 1979.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9, No. 2: 393-417.
- Robertson, David. 1976. *A Theory of Party Competition*. London and New York: John Wiley & Sons.
- Robinowitz, George, and Stuart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 1: 93-121.
- Janda, Kenneth. 1980. *Political Parties: A Cross-National Survey*. New York: Free Press.

[ABSTRACT]

Party Positions and Voter Orientations in Korea:

Focused on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Lee, Jiho | Sogang University

The match between parties' policy positions and voters' ideological orientations is central in the oper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questioned in Korea that voters communicate with parties in policy and ideological terms, and they choose a party in that manner. This paper thus aims to compare party positions derived from policy commitments and voter orientations measured by self-placement. The investigation is based on both party manifesto data and mass survey data. The first finding of analysis is that the parties in Korea have principally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each other in the dimension of 'progressivism vs. conservatism', and then become significant options to electorates in this dimension. Secondly, the paper shows us that the policy positions of parties match to the ideological positions of party supporters in direction, and thus confirms that voters communicate with parties in the dimension of 'progressivism vs. conservatism'. Lastly, a meaningful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while the supporters of leftist parties are more moderate than their parties ideologically, the supporters of rightist parties are more extreme than their parties. This pattern of left bloc differs from Western democracies. It is thought that the supporters of leftist parties are less oriented ideologically, then their preferences are shaped by their parties rather than attracting their parties.

Key Words | party position, voter orientation, ideological dimension, manifesto analysis, party competition

